김민환의 세상읽기

SNS시대, 우리(we)와 그들(they)

커뮤니케이션의 역사로 보면 지금은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시대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페이스북(facebook)이나 트위터(twitter) 등으로 연결된 사회적 망(網) 안에서 살고 있다.

가족 구성원은 집에 머물지만 집이 아니라 SNS의 망에 갇혀 산다. 가족 간의 대화는 접고 SNS의 그물망에서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대화한다. 현대인은 그 망 안에서 정보나 지식은 물론 재미까지 얻는다.

흔히 SNS라고 하면 '마이스페이스'(MySpace)를 연상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1999년에 '아이러브스쿨'이 등장해 인기를 끌었다. 같은 해에 등장한 싸이월드도 급속도로 대중 속으로 파고들어, 온 국민을 이른바 싸이질 열풍에 빠져들게 했다. SNS에 관한 한 우리는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선구적임을 자랑할 만하다.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국내에서 자리 잡은 뒤, 이 두 서비스 망은 SNS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1년 말 현재 536만 명이 페이스북을, 544만 명이 트위터를 이용하고 있다. 여기에 싸이월드나 카카오톡, 미투데이까지 포함시킨다면 우리 국민 대다수가 SNS의 촘촘한 그물에 얽혀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SNS시대의 커뮤니케이션은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위상을 바꾸어 놓았다. 신문이나 방송 등 전통적인 커뮤니케이션 매체가 지배하던 시대에 사람들은 수동적인 소비자나 수용자였다. 그러나 SNS시대에 사람들은 더 이상 수동적이지 않다. SNS는 사람들을 미디어 수용자에서 미디어 사용자로 격상시켰다.

SNS 이용행태에서 두드러진 것이 유유상종(類類相從) 현상이다. 끼리끼리 노는 정도는 현실세계의 수준을 뛰어넘는다. 생각이 같거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의견에 쉽게 동조(follow)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외면(unfollow)하고 만다. 가족이나 학교, 회사 같은 곳에서는 어쩔 수 없어 생각이 다른 사람과도 어울리지만 SNS세상에서는 그렇게 복잡하게 살 생각이 없다.

생각이 같으면 끼리끼리 키득거리고 좋아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외면하고 돌아선다. 그쯤에서 그쳐도 좋을 텐데, 때로는 비아냥거리는가 하면 심한 경우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퍼붓기도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 '우리'(we)와 '그들'(they)이다. 생각이 같으면 '우리'가 되지만 생각이 다르면 '그들'로 편이 갈린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틀렸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게임의 원리가 작동한다.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는 이견수용성(異見受容性)은 낮아지고 '우리'만이 옳다는 의견의 양극화가 가중된다. '우리'끼리 뭉쳐 '그들'을 공격한다. 어떤 사안의 전모가 종합적으로 밝혀진 뒤에도, SNS의 '우리'는 '우리'에 충성하며 기존의 태도를 고집하는 '확신편향'을 유지하곤 한다.

SNS 망에서 나타나는 정보 이용의 편식성은 곧 공론장의 파편화를 초래한다. 공론장은 찢기고 갈린 사람들의 이전투구 싸움판이 되고 만다. '우리'와 '그들'이 대결하는 그 싸움터에서는 숙고(熟考)나 사려(思慮)가 뒷전으로 밀린다. 깊이 있는 철학이 아니라 경망하고 천박한 말로 한 방을 날린다.

SNS세계의 그런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좋은 대중매체가 필요하다. 엄정하고도 체계적인 선별 과정(gate-keeping process)을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균형 잡힌 뉴스나 논설을 내보내는 좋은 신문이나 방송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SNS라는 난장(亂場)이 공론장(公論場)으로 진화할 수 있다.

그러나 요즘 우리 대중매체는 SNS시대의 역기능을 해소하기 보다는 SNS에 편승하여 '우리'와 '그들'을 확대 재생산하고, 나아가 의견 양극화를 극단적으로 부추겨 사회통합을 깨트리기 일쑤다. 광주의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 특수부대가 투입되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여과 없이 방송한 종편의 행태가 그 좋은 예다.

주류신문은 지난 총선 국면에서 '나꼼수'의 김용민을 막말꾼으로 몰아붙였는데, 그 김용민도 이번의 종편처럼 무지막지한 막말을 한 적이 없다. 더구나 한 종편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나가 북한군이 광주에 투입되지 않았다는 근거가 있느냐고 반문했다는데, 그 수준이라면 방통위는 그 작자의 정신감정부터 먼저 해봐야 할 것 같다.

사이버공간이나 온라인 공론장이 등장함으로써 민주주의가 획기적으로 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우리는 SNS의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대의제로 대표되는 간접민주주의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해 제도권의 대중매체는 '우리'의 편협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와 '그들'이 화해하는 사회통합의 장에 대중매체가 있어야 한다. 〈고려대 명예교수〉

종교칼럼

물질의 노예생활

하 성 래
원불교 광주·전남교구 교무

우리는 얼마나 가져야 안분하는 삶을 영위하며, 부족함 없는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사람마다 그 기준은 천차만별일 것이다.

요즘 페이퍼 컴퍼니와 탈세로 사회가 시끄럽다. 서민들은 세금이 조금만 밀려도 독촉에 시달린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엄청난 추징금이 있어도 그냥 가려고 한다. 인생살이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말한다. 하지만 재물에 눈이 멀어 부정부패를 일삼는 이유는 도대체 누구를 위하고 무엇을 위한 것일까? 그들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옛 말에 '아흔아홉 마지기 논을 가진 사람이 한 마지기 논을 가진 사람에게 샘을 내서 그 한마지기를 채워 백마지기를 만들려고 애쓴다' 라는 이야기가 있다. 물욕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물욕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물질의 노예로 생활하면서도 그것을 즐거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안타깝다. 하지만 안타깝다! 라고 생각해주는 사람을 그들은 오히려 바보라고 비웃는다.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사업상 어쩔 수 없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사람도 있을 것이다.

독립운동가인 우당 이회영 형제는 경주 이씨로서 직계조상인 이항복 이래 10명의 정승을 배출한 조선의 대표 명문가로서 어마어마한 부를 소유했다. 그들이 다른 명문세족들과 달랐던 점은 나라를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걸맞는 도덕적 의식인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을 이행했다는 것이다.

친일의 대가로 부부동반 일본관광을 위해 혈안이 된 귀족과 관료들은 자신들의 재산과 기득권 보호에만 열을 올렸고 자신의 뿌리를 잊었다. 반면 이회영 형제는 자신의 뿌리는 물론 '공직자의 책임'까지 지켰다. 도덕적 책임을 알고 있던 이회영은 일제 치하에서는 살 수 없다는 신념하에 자신의 형제들과 함께 압록강을 건너 만주로 향한다.

조선 최고의 가문이었던 만큼 50여명의 대인원, 말은 백여필, 마차는 수십대였다고 한다. 조선에서 급하게 방매한 전답과 가옥은 현재 시가로 최소 600억이었다고 하니, 그들이 얼마나 부호였는가를 알 수 있다. 이회영 형제들의 모든 재산은 만주에서독립활동에 쓰여 졌다.

이런 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나라가 존재하고 현재가 있는 것이다. 반면 자신의 안위를 위해, 세금을 줄여 자신의 기득권만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은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듯 하다.

그러니 서민의 입장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영원한 숙제이다.

원불교 교조이신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는 "세상만사가 다 뜻대로 만족하기를 구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천만 년의 영화를 누리려는 사람같이 어리석다" 라는 말씀을 대종경 인도품 29장에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모래 위에 집을 화려하고 멋지게 짓고 살고 있지만 바닥이 튼튼하지 못해 언제 무너질지 걱정은 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

물질에 끌려 다니며 양심을 아무렇게나 팔아 버리는 물질의 노예생활을 하는 벗님들이여!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사용처가 잘못되면 도리어 그것이 독이 된다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지혜 있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십분의 육만 뜻에 맞으면 그에 만족하고 감사한다.

또한 십분이 다 뜻에 맞을지라도 그 만족한 일을 혼자 차지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같이 나누어 즐겨야 복이 항상 무궁하다는 성현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한다. 하루 속히 물질의 노예생활에서 벗어나, 작은 것이지만 서로 주고 받는 소박하고 아름다운 세상의 착한 손이 되고 예쁜 마음이 되기를 기도해 본다.

기고

나랏돈은 눈먼 돈이 아니다

정 경 준
변호사·광주고용노동청 분쟁해결지원팀

수불석권(手不釋卷)은 삼국지(三國志) 오지(吳地) 여몽전(呂蒙傳)에 나오는 말로 '항상 손에 책을 들고 글을 읽으면서 부지런히 공부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바쁜 일상에 쫓기다 보면 과중한 업무와 시간 부족으로 손에서 책을 놓아버리기 십상이지만, 누구나 마음 속에는 수불석권과 자기계발의 열망을 간직하고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수불석권의 정신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실현한 제도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사업'이다.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 등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시키고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제도다. 현재 매년 3000억원 가량이 사업주에게 지원돼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를 업그레이드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업주와 훈련기관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올해 초 우리 지역에서는 인터넷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면서 교육위탁업체와 교육비 거래를 하고 훈련성적·진도 등을 조작해 부정하게 수료시키는 방법으로 지원금 22억4000만원을 편취한 훈련기관 대표자 등이 검거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들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교육비를 훈련기관이 대납해주거나, 교육관리시스템(LMS)에 '강제수료', '자동진도' 기능을 탑재해 훈련생들이 교육사이트에 접속하지 않더라도 학습진도율이 자동으로 올라가고 평가점수 등이 수료 가능한 값으로 변경되도록 데이터를 조작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훈련기관의 부정수급에 가담해 지원금을 수령한 사업주에 대해서 훈련비를 반환하게 하고, 그 액수만큼을 추가 징수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들은 한결같이 훈련기관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줬을 뿐 몰랐다'고 항변했으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은 단순한 민사적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공적 목적 달성을 위한 행정법규다. 행정법규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는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그러므로 '몰랐다'는 사업주의 주장에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업체에 명의만 빌려준 경우도 '지원을 받은 자'에 해당돼 지원금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이 가능하다. 따라서 부탁을 받고 단지 명의만 사용하게 해줬다는 주장으로 부정수급의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

더 나아가 애초에 이러한 부정훈련과정에 공모한 사업주는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이외에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범죄행위의 엄연한 공범이다.

직업능력개발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면 환수·추가징수 및 최대 3년간의 지원제한을 받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는 내면에는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구태의연한 사고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어차피 국가의 세금에서 나오는 돈은 내가 안 써도 누군가가 쓴다는 인식이 이러한 부패와 부정을 부추기고 있다.

이들이 부정수급한 직업능력개발 지원금은 근로자들의 월급에서 자동으로 떼어 갈 고용보험기금으로 만든 재원으로서 부정수급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다수의 선량한 근로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대상은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전국 140만 기업 및 사업체와 1000만여 명의 근로자이며, 지원금은 2012년을 기준으로 3400억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사사로운 탐욕의 피해자는 국가뿐만 아니라 나와 우리 모두인 것이다.

열심히 일하는 대한민국 근로자들의 주머니를 가볍게 만드는 부정수급은 범죄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아파트 이사 엘리베이터 사용료 13만원 "기가 막혀"

동생이 이사를 하길래 이삿짐 나르고 가구 정리하는걸 도와 주러 갔다가 언짢은 장면을 목격했다. 이사를 할려면 사다리차를 빌리거나 혹은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만 한다. 그런데 이날 마침 동생은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기로 했다. 워낙 짐도 간소했고 이삿짐 업체에 사다리차까지 부를 정도가 안됐기 때문에 조그만 트럭과 거기에 딸린 인부 두명만 샀던 모양이다.

하지만 이삿짐을 나르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겠다고 관리사무소에 갔던 동생이 씩씩거리며 돌아왔다.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무려 13만원이나 내라고 했다는 것이다. 내가 생각해도 기막히고 어처구니 없었다. 이사를 가든 오든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경우 어느 아파트 단지든지간에 그 사용료를 내는건 당연하다. 그러나 내가 경험한것은 물론 지금까지 주변에서 이사할때 엘리베이터 사용료는 보통 적게는 3~4만원, 많아봤자 5~6만원 안팎이었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무려 13만원이라니 도무지 납득이 안갔다.

참 어처구니 없었다. 이사를 하다가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면 그 수리비만 물어주면 될 일이다. 아울러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다는 말도 이해가 안됐다. 그 주민들은 평생 이사를 한번도 안다닐까? 아니면 자기네들이 만든 규약이니 자기들은 이사 갈때 3만원만 내면 되고,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덤테기 씌우자는건가? 정말 몰인정한 사람들이 아닐수 없었다.

어쨌거나 엘리베이터를 사용 안할수 없었고, 또 그 아파트 규약이 그렇다고 하니 동생은 별수없이 13만원을 주기는 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 사용이 조금 불편하다고 사용료를 그렇게 터무니없게 물리는 것은 다수의 횡포일 뿐이다. 이런것도 결국 주민간 갈등의 요인이 되고,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 불신의 요소가 되니 이것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그 상한선을 정할 수는 없을까.

▲민경화·광주 광산구 산정동

社 說

우후죽순 산업단지, 과감한 구조조정을

지역 경쟁력 제고를 내세워 전남도내에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는 산업단지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전남도내 시·군이 기업 입주 수요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산업단지를 주먹구구식으로 조성한 데 따른 것이다. 이미 나주 등 일부에서는 산단 조성을 둘러싼 유착마저 불거진 상황이다.

지방 산단의 가장 큰 문제는 우선 과포화라는 데 있다. 전남도내에서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산업단지 미분양 용지는 수요를 훨씬 상회해 사실상 놀려야 하는 실정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개발 내지 미분양된 산업용지는 2992만1000㎡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지난 2011년 국토부 용역 결과, 도내에서 연간 필요한 면적은 114만㎡로 수요에 비해 26.2배가 많은 산업단지가 조성됐다. 그동안 산단 조성 관련 행정이 얼마나 즉흥적이었는지를 반증한다.

산단만 조성해 놓고 들어올 기업이 없으면 되레 큰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산단 조성이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견인차가 아니라 단체장의 치적용에 불과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명박 정부와 현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기업의 지방 이전이 부진한 데다 경제의 장기침체로 산업용지 수요를 찾기 어렵다.

그런데도 무턱대고 산단 조성에만 매달리는 것은 너무 현실과 맞지 않는다. 더욱이 최근 나주 미래산단 조성 과정에서는 공무원과 업체 간의 검은 결탁이 불거지기도 했다. 산업단지 지정만 하고 후속조치가 없어 토지 소유주들의 민원도 빗발치고 있다.

뒤늦게나마 지자체의 무분별한 산업단지 개발에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서 전남도도 일부 계획을 축소하거나 조정하기로 했다. 산업단지가 더 이상 단체장의 공적 쌓기나 복마전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우후죽순 격인 산업단지를 빨리 구조조정해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산실'이 되도록 해야 한다.

여수 '검은 비' 산단오염에 문제있지 않나

여수시 율촌산단 일부 마을에 흑비(黑雨·검은 비)가 내려 관계 당국이 원인규명에 나섰다. 이 검은 비에는 미세모래, 쇳가루 분진 등이 포함돼 있어 농작물은 물론 대기, 토양, 수질오염 등 주민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8시께 율촌면 조화리 일대에서 30분간 검은 비가 내려 차량 100여 대와 주택, 농작물 등이 검은색 물질로 오염됐다고 한다. 주민들은 "지난 1년여간 이 일대에 검은 비가 지속적으로 내려 관계기관에 호소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농촌 마을인데도 호흡기 질환 환자가 많이 발생한 것은 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이 일대가 화력발전소, 조선소 등이 입주한 율촌 제1산업 단지에서 1~3㎞ 이내에 있어 업체들이 작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진이 빗물에 섞여 내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이날 평년 수준(풍속 4m/s 이하)의 동풍이 불면서 분진이 산단 오른편에 위치한 조화리 쪽으로 날아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주민들은 차량 등에 쌓인 분진이 자석에 붙는 점으로 미뤄 인근 조선소에서 도장작업을 하기 전, 강한 압력으로 모래를 뿌려 녹을 제거하는 과정에 분진이 발생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전남도와 여수시는 현장 시료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하는 등 본격적인 원인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수질·대기·토양오염 등에 대한 정밀 조사도 병행해야 한다.

여수산단 인근 주민들은 최근 잇따른 폭발사고와 화학물질 유출 등으로 '걱정'을 달며 살고 있다. 차제에 산단 전체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를 조사해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까지 잦은 검은 비에도 관계기관이 주민들의 민원을 묵살하고, 방치해온 건 직무유기나 다를 바 없다.

無 等 鼓

지구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스포츠를 꼽으라면 주저없이 골프라고 답하는 사람들이 많다. 18홀 라운딩을 통해 반전의 인생 역정을 체감할 수 있고, 나이 든 사람도 얼마든지 젊은이를 이길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다.

골프의 매력은 그래서 '마력(魔力)'이라고도 한다. 한번 배우면 좀처럼 절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무총리를 지낸 고건씨와 이해찬씨가 골프와 관련해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1981년 어느 무더운 여름. 유난히도 가뭄이 오래 계속돼 논밭이 쩍쩍 갈라지고 농민들의 마음은 타들어가던 때였다. 당시 고건 농림부장관은 휴일 아침 주한미군 고위 관계자와 예정된 라운딩을 위해 머릿 속으로 이른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며, 기분좋게 골프장으로 향했다.

그런데 국도를 달리던 차가 갑자기 멈춰 선 것이 아닌가. 경위를 파악해본 결과 가뭄에 양수용펌프를 오토바이에 싣고 가던 농민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것을 알았다.

고건은 '농민들은 물 한방울을 대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데 주무장관인 나는 한가하게 골프장으로 가고 있구나'라며 곧바로 차를 돌려 청사로 향했다. 그는 공직자로서 골프는 이제 그만이다고 결심한 후 끝까지 약속을 지켰다.

반면 이해찬은 두번에 걸쳐 골프로 곤욕을 치렀다. 2005년 4월 5일, 식목일에 골프를 강행하다 천년사찰인 양양의 낙산사가 불에 타자 부랴부랴 청사로 돌아왔다. 2006년 삼일절에는 주가조작과 밀가루 가격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영남제분 회장과 골프를 쳐 구설수에 올랐다.

골프와 절제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고위 공무원들의 골프를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한다. 새정부 들어 자의반 타의반으로 '골프금지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공무원들이 골프를 안치면 썰렁한게 골프장의 현실이다. 하지만 이는 때와 장소를 가릴줄 아는 공무원에게나 해당되는 말이다.

/장필수 사회2팀장 bungy@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 제 부	2200-663	경영지원국	2200-515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문화사업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F A X	222-8005〉
정 치 부	2200-612	체 육 부	2200-697	〈F A X	222-0195〉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광고마케팅국	227-9600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267〉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